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20일째 행적 파악 안돼

쌍둥이 어디로 사라졌나...친모도 돌연 잠적

7년간 병원진료 기록 전혀 없고 영암 거주지서 애초부터 살지 않아 친모 말바꾸기·답변 회피·출석 거부하다 휴대전화 끄고 종적 감춰 친모 가족들도 결혼·출산 몰라...경찰, 강력범죄 가능성 수사 확대

올해 전남 한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예정 이던 쌍둥이 형제의 종적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으며, 학교·자치단체·경찰 조사에도 20일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광주일보 2019년 1월 23일자 6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과정에서 지난 7년간 쌍둥이 병원진료 흔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력범죄 여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혼모인 쌍둥이 친모(28)는 그동안 쌍둥이 형제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말 바꾸기·답변 회피·경찰서 출석 거부로 일관하다 급기야 최근에는 휴대전화마저 꺼두고 종적을 감췄다.

영암경찰은 "영암 대불초등학교로부터 의뢰받은 쌍둥이 형제 소재파악 사건 담당을 기존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팀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형제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필수 국가예방접종 등을 포함한 병원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 회의를 거쳐 강력사건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대불초 입학예정자인 쌍둥이 형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학교와 자치단체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쌍둥이 형제는 앞서 지난 3일 대불초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에 나란히 불참했다. 학교와 읍사무소가 소재파악에 나섰다나 소재 확인에 실패했다. 행정기관 전산망에는 쌍둥이 모자가 영암 모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나왔으나, 현장 조사를 해보니 애초부터 이곳에 살지 않았다는 주변

인들의 진술을 얻는 데 그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쌍둥이 친모가 아들들을 데리고 출국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출국기록은 없었다.

지난 17일 교육당국 의뢰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않게 흘러갔다. 경찰은 친모 부모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쌍둥이의 친모가 결혼을 한 적도, 쌍둥이를 낳은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확보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통신수사를 거쳐 쌍둥이 친모와 연락이 닿은 후, 강력 범죄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둥이의 친모가 아들들의 소재를 묻는 경찰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는 거라면, 단순 사실조사 확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친모는 쌍둥이 아들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지만) 친부가 키우고 있다. 애 아빠가 경찰쪽으로 연락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가 3일 정도 지난 뒤 경찰이 '애 아빠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 요청을 하자,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친부 성명과 주소지,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거주지(주소지는 삼호읍 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기도) 일산'이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특히 '아들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소재확인마저 거부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정서적 학대)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도 친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급기야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쌍둥이가 지난 7년 동안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친모마저 연락두절되자 경찰은 강력사건 여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정할 순 없지만, 친모의 수상쩍은 언동, 전무한 의료기록 등 파악된 사실만 놓고 볼 때 강력범죄 여부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서울·일산 등에 수사팀을 급파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23일 낮 12시 33분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한 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에서 나무가 쏟아져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자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달리던 25t 트럭서 나무 '우르르'...뒷차 운전자 중상

23일 낮 12시 33분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한 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에서 나무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1t 포터 운전자 A(73)씨가 허리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에 가득 실려있던 나무가 쏟아져 포터를 덮쳤고, 이 충격으

로 포터 차량이 파손되고 A씨가 다쳤다. 소방당국은 유압 장비를 이용해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쓰레기봉투 600장 빼돌린 환경미화원 해고 '지나치다'

광산구 패소...행정소송 검토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빼돌려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결정이 나왔다.

2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린 1심을 받아들였다.

광산구 공무직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업무용 쓰레기봉투를 서구인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사용했다. 광산구 봉투가 다른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꾸준히 배출된다는 신고로 A씨는 꼬리가 밟혔다.

광산구는 A씨 집에서 100ℓ 짜리 공공용 봉투 236장을 회수하고, 7장을 이미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부모 집에 보관한 공공용 봉투 200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가 빼돌린 공공용 봉투 440

여장의 가치는 중량계 봉투값으로 환산하면 112만여원에 이른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했으나 구청이 거둬들인 분량은 제외하고 집에서 쓴 7장(1만8000원)만 부당 이득으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쓰레기봉투 횡령과 비슷한 시기가 잇단 지각, 태업 등으로 3차례 확인서(경위서)를 작성했던 문제까지 더해 A씨를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수년 전 지각과 무단결근 누적으로 경징계(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광산구 징계위는 재심까지 거쳐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단체협약 조항이 정한 해고 등 중징계 기준은 '300만원 이상 횡령'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 관계자는 "근무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횡령 규모만 쟁점이 된 것 같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회사 대표 시켜주겠다" 속여 돈 뜯어낸 60대



○일면식도 없는 광주시장과 재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광주형일자리' 기업지역 법대대표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쇠고랑.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0)씨는 지난해 12월께 산악동호회에서 알게 된 A(64)씨에게 "중국 한 자동차 회사 법대대표다. 초기투자를 도운다면 광

주 법대대표로 임명하겠다"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뜯어갔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광주시장과 신세계 부회장으로부터 광주형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말하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광주시장 등의 가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전화를 거는 척하는 수법으로 상대를 속였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슬며시 고개 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남 해상 울들어 22척 적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2척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14.5%에 달했다.

22일 서해어업관리단은 신안군 흥도 북

서쪽 75km 바다 위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A호(126t, 승선원 10명)와 B호(126t, 승선원 10명) 2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들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4t여를 적게 기재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 바다 위에서 중국 어선 C호(277t, 승선원 16명)와 D호(277t, 승선원 15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 바다 위에서도 중국 어선 E호(249t, 승선원 17명)와 F호(249t, 승선원 16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올 들어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22척으로

지난해(151척)의 14.5% 수준이다.

서해어업단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서해남부해역 고등어-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모이는 황금어장이 형성되며 불법 조업이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해해경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 4~10일)을 앞두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